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 기반구축 추진

2007년까지 5개년 총 82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설비분야 기술개발 향상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무배출(Zero Discharge)형 환경설비란 재이용, 자원화, 무해화가 가능할 정도로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환경부하의 제로화는 물론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환경설비이다.

이러한 개념의 환경설비는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원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를 포함한 환경설비는 속성상 다양한 공정과 기기로 구성되어 있어 영세한 환경설비업체들이 신기술 검증에 소요되는 과다한 초기투자에 애로가 있어 기술개발 후 상용화나 시장진입에 곤란을 겪어왔다.

따라서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실증플랜트 및 진단, 평가장비 등의 공동활용 뿐만 아니라 산, 학, 연 공동연구 또한 용이 해졌다.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안) 입법예고

현 '석유사업법' 전면 개정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석유시장 변화를 반영,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등을 포함한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재의 '석유사업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1970년 동법이 제정된 이래, 95년 석유사업자유화를 반영한 전면개정에 이어 두 번째의 전면개정이며

법률내에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도를 포함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단속규정 현실화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법률안 전면개정작업을 해왔는데, 동 법률안에 따른 시행개정작업도 현재 진행중이며, 법률개정안 추진에 맞춰 시행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이번의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95년도 법률개정으로 석유산업의 자유화가 추진되었으

나,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하여 그간 석유유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은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개선

관련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낮은 수용성 및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직접지원사업실시 등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380만kW급 원자력 발전소 지원금에 상당한 3,000억원 정도이며 이를 기본지원사업(공공시설, 소득증대,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용자사업(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자체장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지원사업과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시행하는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단순화하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는 지자체장이 지역주

민이 수혜를 실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산자부, "정밀안전진단 등 도시가스사고방지대책" 도입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개정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대책 추가 및 가스시설 시공자에게도 피해 발생시 보상토록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제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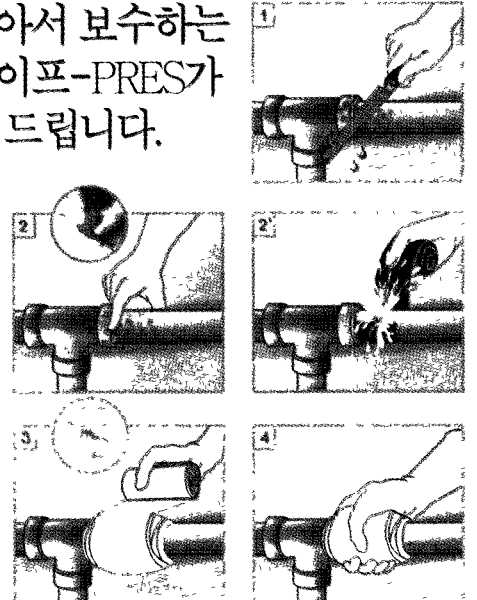
수도권 등 도심지내 노후 고압가스 배관에서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가스시설 시공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

현재 모든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도심지내 설치되어 있는 15년 이상 된 고압가스배관에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동 진단은 첨단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기검사로 확인이 불가능한 가스시설의 위해 요인을 검사함으로써, 수도권 등 도심지를 통과하는 노

사고 있는 배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편하게 감아서 보수하는 배관보수 테이프-PRES가 쉽게 해결해 드립니다.



- 사용방법**
1. 밸브를 잠그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2. 압력을 재어할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제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압력이 재어가 안되면 생고무 롤을 누수지점에 감아준다.
 3. 보수테이프를 물에 3-5초간 활성화 시킨후 감아준다.
 4. 다 감은 후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표면을 매끄럽게 해준다.

- 배관 보수제** 손으로 반죽하여 매꾸고 붙여 주는 PSI 사의 총 9종의 스틱형 보수제
다목적용 / 스틱용 / 알류미늄용 / 비철금속용 / 플라스틱용 / 콘크리트용 / 나무용 / 수중용 / 고온용
- 배관 보수제** 주걱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제와 경화제를 반죽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 / ALUMINUM / STAINLESS / BRONZE / TITANIUM / CERAMIC / WEAR RESISTANCE(내마모성)
- 배관 케미칼**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침관제, 세관제 / 핀코일 세척제 / 바닥 및 설비 세척제 등

후 고압가스배관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98년 이후 시공불량으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전체 보일러사고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시설 시공자는 보험가입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시공불량에 의한 사고는 주로 소규모 무자격 업체가 시공하는 가스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부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자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설, 천안 '가스안전교육원' 개원

과학화되고 선진화된 가스안전교육 실시

산자부는 지난 5월 28일 배성기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장 등 내외빈 150여명을 모시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천안 교육원 개원식을 가졌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가스안전교육원은 25,000평 부지에 본관동, 실습동 등 4개동으로 건립되었으며, 강의실, 생활관 및 실습장을 갖추고 다양한 체험식 실습교육 시스템을 구축, 26개과정 연간 11만여명에 대해 현장실무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가스안전교육원은 지난 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후 대형사고가 취급부주의 및 안전불감증 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가스안전관리강화를 위해 96년 9월 교육원건립계획이 확정되어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0년 1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9개월에 걸쳐 건립되었다.

이날 개원식에서 산자부 배성기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교육·홍보 효과에 힘입어 가스사고는 98년도 397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0.7%씩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안전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과학화되고 선진화된 가스안전교육을 통해 가스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 최대전력수요 전년비 6.7% 증가

산자부 "전력수급 차질 없을 것" 밝혀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전년대비 6.7% 증가한 4,885만kW 수준으로 예

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6일 '2003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전력수급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4,885만kW 수준으로 예상되나 지난해 12월 준공된 영광원자력 6호기(100만kW)와 부산북합 1, 2호기(90만kW) 등의 신규발전설비가 준공되고 출력상향운전을 통한 공급능력이 약 114만kW 확대돼 전력공급능력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총 5,516만kW로 수급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대수요 시 공급 예비율은 12.9%(631만kW)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산자부는 7.8월 중 산업용과 업무용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축냉식·가스식 냉방기기 보급으로 전력수요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요관리를 통한 최대전력수요를 감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발전설비용량이 부족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최대수요가 2,052만kW에 이르면서 공급예비율이 2.8%(58만kW)에 그치고, 이상고온 때는 2,134만kW로 증가하면서 예비율이 마이너스 1.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수도권 별도의 수급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용가스보일러 효율표시 개선

산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 개정고사...품목 12개로 늘어

가정용가스보일러에 대한 효율표시가 6월부터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가정용가스보일러 난방열효율 표시가 소비효율 시험결과 실제측정치인 측정열효율과 이보다 낮게 선택한 표시열효율로 구분된다.

또한 그동안 지정시험기관의 효율 시험을 거쳐 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정밀검사 성적서로 단일화된다.

2004년부터 대상품목을 확대, 현행 10개에서 12개로 늘어나 김치냉장고와 전기발송이 추가됐다

또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등근형, 직관형 형광램프에 2004년부터 최근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27W, 36W형의 콤팩트형광램프를 추가했다.

에·너·지·단·신

IEA (국제에너지기구) Mandil 사무총장 방한

동남아 연구 프로그램, 한국 지원 요청

IEA Mandil 사무총장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가스회의' 참석전에 한국의 에너지관련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기 위해 지난 27일 방한했다.

금년 2월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을 처음 방문한 Mandil 사무총장은 29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과 면담했다

금번 면담을 통해 동 사무총장은 한국의 IEA가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동북아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IEA의 동북아 연구 프로그램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정책수립에 긴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사무총장의 금번 방한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IEA의 깊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7월 수송용 LPG가격인상 따른 특소세 인상분 정부 '택시에 한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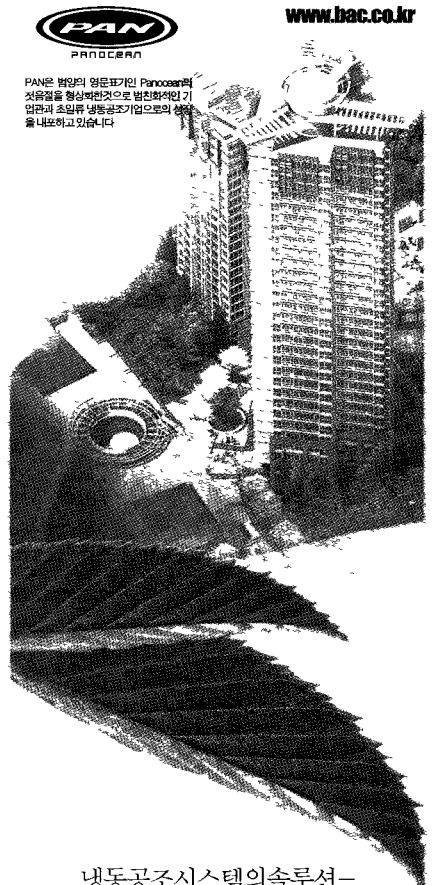
정부가 7월부터 LPG차량에 사용하는 수송용 LPG(부탄)에 대한 가격인상을 단행하면서 택시에 대해 특소세 인상분을 정부보조로 환납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달 수송용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현행 리터당 25.9원에서 3.5원 오른 29.4원으로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도 리터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94원 인상, LPG 관련세금이 대략 123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세금 인상분만큼 수송용 LPG판매가격도 올라 택시사업자들의 경영악화로 택시운전 종사자의 생계 압박요인으로 작용, 이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예방조치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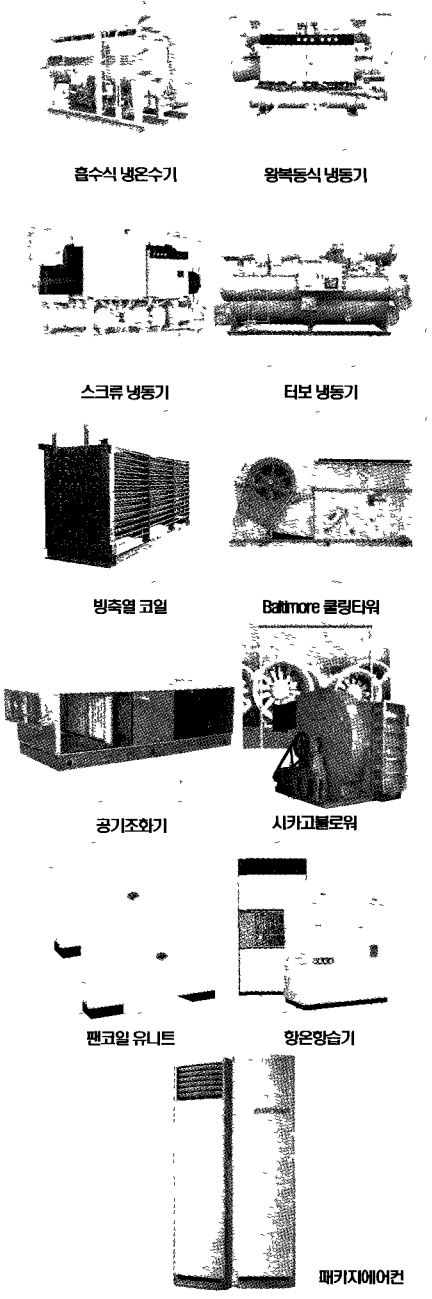
윤수영 산자부 가스산업과장은 "액법 시행령 개정 등 서민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차원의 가스정책에 대해 청와대 민원비서실로부터도 적극적인 동의를 끌어냈고 관련부처인 건교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광고게재안내
T.(02)2679-6343



냉동공조시스템의솔루션- 판오션 에어컨

건물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범양냉방공업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555-0101(교:761-763)
♣ 콜로버서비스 : 080-022-8815-6